

美 IEEPA 판결 및 관세조치 변화 민관 긴밀한 소통으로 대응

- 김정관 장관, 美 IEEPA 판결 및 美 추가 관세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 주재 -

산업통상부(이하 산업부)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(국제비상경제 권한법) 위법·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2.23.(월)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에서 경제단체, 주요 업종별 협회,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. (붙임 개요)

금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,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,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% 일률 관세 부과,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,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
김 장관은 “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, 한-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강조하고, “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,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·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영만 (044-203-562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익 (044-203-5622)
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안홍상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민 (044-203-5658)

☐ 일시 및 장소 : 2.23.(월) 08:30~09:30

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8층 대회의실

☐ 참석자

- (산업부) 장관, 통상차관보, 다자통상법무관, 산업정책관, 무역정책관, 통상정책국장^代, 통상법무기획과장, 미주통상과장 등
- (관계부처) 재경부, 외교부, 농식품부, 기후부, 복지부, 중기부, 관세청
- (경제단체·지원기관) 대한상의·무역협회·중기중앙회·한경협·코트라
- (업계) 자동차, 반도체, 배터리, 기계, 화학, 가전, 철강, 바이오, 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

☐ 주요 안건

- 美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주요 내용 및 대응방향

☐ 진행 순서

시 간	내 용	비 고
08:30~08:35 (5')	모두발언	산업부 장관
08:35~08:45 (10')	美 IEEPA 관세 판결 주요 내용 및 대응방향	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장/ 미주통상과장
08:45~09:27 (42')	토론	참석자
09:27~09:30 (3')	마무리발언	산업부 장관